

# 한전, PCB 폐변압기 주택가 방치

## 한전측 오염여부 확인중 해명 ... 순익감소에도 성과급 확대 방만경영

10월18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과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및 자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서는 한전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폐변압기 수십만개를 전국 주택가 등에 방치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발암물질인 PCB(Polychlorinated Biphenyl)가 포함된 9만7127개의 폐변압기가 보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 주변 야적장에 방치돼 있다”면서 “PCB는 1979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폐변압기를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흙 위에 방치하고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준호 한전 사장은 “폐변압기가 PCB에 오염됐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결론이 나는대로 오염된 변압기는 버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03년 3조590억원에서 2004년 2조8800억원, 2005년 2조4486억원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면서 “그러나 한전 사장 및 감사의 연봉은 갈수록 늘어났고 연봉 대비 성과급 지급규모도 2003년 연봉의 77%에서 2004년 105%, 2005년 177%, 2006년 164%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회사 순익이 감소하는데도 사장과 감사가 억대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전 뿐만 아니라 남부발전 등 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5년부터 직원 1인당 연간 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해 2006년 1-9월 147억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았다”면서 “직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편법적 급여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한전은 방만한 공기업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공금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한전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처리, 재산관리 소홀, 공금유용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2407건으로 연평균 687건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9>